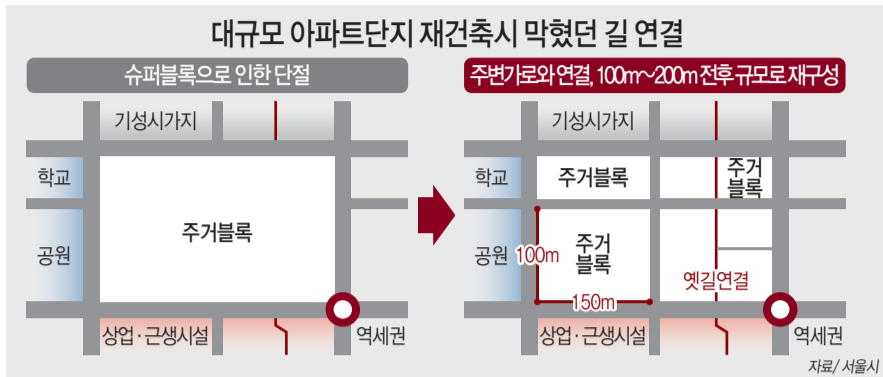


대규모 단지 내 통로... 슈퍼블록 없애 열린공간으로

(아파트)

서울시 아파트 단지조성기준 마련
한편 200m 이상 블록 분절해 재구성
저층 주거지 재개발시 가로 기능 유지



서울시가 '도시의 섬' 아파트를 이웃과 소통하는 열린 공간으로 만든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막힌 길을 다시 연결하고 이 길을 중심으로 지역 커뮤니티 시설을 짓는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파트 단지 조성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폐쇄된 아파트 단지가 사회적 병리 현상의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 시는 "아파트는 특정계층의 주택이라는 인식과 소통의 부재로 인한 갈등이 생긴다"며 "단일화된 환경으로 다양성과 창조적 사고가 결여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시는 ▲길의 연결 ▲커뮤니티 공간 조성 ▲수요 맞춤형 주거 ▲주변과의 경관적 조화를 골자로 한 '아파트 조성 기준'을 세웠다.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모든 아파트에 이 기준이 적용된다.

우선 시는 아파트로 단절된 길을 잇는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재건축 시 한변의 길이가 200m 이상인 슈퍼블록은 100~200m로 분절해 재구성해야 한다.

다. 블록 사이의 길을 만들어 나누고 인근 가로와의 연결성, 지역 자원과의 접근성을 고려해 단지를 계획해야 한다.

저층 주거지를 재개발할 경우 기존 주요 가로의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옛 길과 물길 등 전통적인 도시조직은 보전·복원한다.

새롭게 생긴 아파트단지 내 길을 중심으로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 들어선

다. 다시 연결되거나 보전된 가로는 지역 사회 소통을 위한 생활공용 가로로 바뀐다. 이곳에는 외부인도 이용할 수 있는 주민공동시설이 생긴다.

시는 미래 수요와 지역의 특성·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토록 할 방침이다.

사회복지시설과 학교, 공공청사, 문화·체육시설은 실버케어센터, 재택근무시설, 다문화 소통센터, 일자리지원 시설 등 저출산, 고령화를 대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바뀐다. 노인정과 어린이집, 작은도서관은 헬스케어센터, 공유비즈니스센터, 아이돌봄센터로 변신한다.

이와 함께 시는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공급해 인구와 가구구조 변화에 대응한다. 1~2인 가구, 노인, 청년 등 거주자의 생활패턴을 고려한 평면 특화 및 주동 배치를 검토한다.

예컨대 노인 특화동에 공동건강관리 공간을 설치하고 무장애 설계를 적용하거나 소규모가구 특화동에는 공동주방을 만든다.

아파트단지 내·외부 가로는 보행자 시각에서 디자인적 일체감을 주도하도록 관리한다. 시는 도시의 경관적 맥락을 고려한 지구 차원의 입체적 경관 가이드 라인을 마련한다.

이 지침은 아파트지구, 택지개발지구, 재정비촉진지구 등 지구 차원의 계획이 먼저 수립되는 아파트 밀집지역에 적용된다.

시는 "주변 도시와 단절된 기존 아파트 단지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미래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아파트단지 조성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자동차세 미리 내고 10% 혜택 받으세요”

(세액공제)

서울시 '자동차세 선납신고·납부'

서울시는 일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선납 신고·납부'는 지방세법 제128조 3항에 의거, 해당 기간 내에 1년간 납부할 세액을 한 번에 신고하고 내면 1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희망자는 이달 16~31일 ETAX 홈페이지나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 구

청에 방문해 1년치 자동차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지난해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는 이번 달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10% 공제가 미리 반영된 납부서를 관할 구청으로부터 받아 볼 수 있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김현정 기자

박원순 시장, 워싱턴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 방문

“선조의 헌신 기억해야... 독립 흔적 보존 지원”

외교공관 중 유일하게 원형 보존
美 시민권자 1호 추정 이화손 참배

미국을 순방 중인 박원순 시장이 대한제국의 흔적을 찾아 한미 우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12일(현지 시간) 워싱턴DC의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을 찾았다고 13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어려운 시기에 선조들이 보인 헌신의 노력을 우리가 기억해 좀 더 좋은 나라, 더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가고 한미간의 우호를 더 강력하게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며 "독립을 향한 당시의 흔적들을 보존하기 위해 서울시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이하 공사관)은 1889년 2월 대한제국이 서양 국가에 처음으로 설치한 외교 공관이다. 16년간 미국주재 대한제국 공사관으로 사용됐다. 외교적 지평을 확장하고자 했던 구한말 자주외교의 첫 시작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워싱턴DC의 19세기 외교공관 중 유일하게 원형 그대로 남



미국 순방 중인 박원순 시장이 12일(현지 시간) 구한말 자주외교의 상징적 공간인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을 방문했다. /서울시

아있는 유일한 공사관 건물로서 의미를 더한다.

공사관 건물은 고종이 2만5000달러에 매입했다. 1910년 경술국치 이후 일본 공사가 5달러에 사들이고는 곧장 10달러에 미국인에게 매각했다.

1940~1950년대 제대군인 재활병원, 1960년대 화물운수노조 사무실로 쓰이다가 민간인에게 매각됐다. 2012년 한국 정부가 350만달러에 다시 사들였고 복원을 거쳐 2018년 5월 전시관 형태로 문을 열었다.

박 시장의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 방문엔 캐슬린 스티븐슨 한미경제연구소 소장이 동행했다. 이들은 한미 외교관계의 우호적인 역사적 공간을 함께 둘러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캐슬린 스티븐슨은 전 주한 미국대사를 역임한 인물로, 대표적인 친한파 인사다.

이어 박 시장은 미국에서 태어난 최초의 대한제국 외교관 자녀이자 미국 시민권자 1호로 추정되는 '이화손'의 묘터를 방문해 참배했다.

/김현정 기자

‘소형 태양광’ 지원 10MW→ 20MW 확대

(자가용)

서울시 생산발전량 따라 인센티브

서울시는 올해부터 민간자가용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2013년부터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를 통해 설비 용량 100kW 이하의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생산 발전량만큼 지원금을 지급해왔다.

올해부터는 누적 지원 용량(누적설

비용량)을 10MW에서 20MW로 늘려 민간자가용 발전시설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전력중개시장, 상계거래 등에 등록된 설비용량 100kW 이하 소규모자가용 발전시설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민간이 민간 건물에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생산발전량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내부순환로 단속... 제한속도 70km

서울시는 지난 10일부터 내부순환로 흥지문터널~하월곡분기점 7.9km 구간에서 과속 단속을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제한 속도는 현재와 같은 시속 70km다.

서울시내 11개 자동차 전용도로 중 구간 단속은 내부순환로가 처음이다. 시는 3개월간 시범 단속 후 4월 10일부터 과속 차량에 위반 속도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내부순환로 주변 주택가는 과속 차량들로 인한 교통

소음에 노출돼 있어 방음벽 추가 설치 등을 검토했으나, 고가도로의 구조 안전상 시설물 설치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이에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협의해 구간단속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간 단속을 위해 시는 6개 진·출입로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단속은 구간 시작점과 종점 간 평균속도를 따져 이뤄지기 때문에 진·출입 차량도 단속 대상이 된다.

/김현정 기자

경기도, 기술창업 지원금 대폭 상향... 3800만원 책정

지난 11년 동안 도내 중소기업의 든든한 창업 도우미 역할을 한 '경기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올해 사업화 지원금을 늘려 창업자들을 돕는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은 우수한 아이디어 또는 아이템을 보유한 도내 예비·초기 창업자의 사업화를 지원, 창업 성공률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경기도의 대표 창업 지원사업이다.

지난 2009년 사업을 시작한 이래 2019

년까지 2100여명의 창업자를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사업 참여 경쟁률이 5:1이 넘는 정도로 예비 창업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기업 생존율'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실제 통계청의 '2018년 기준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 전체 신생기업의 1년 생존율은 65.0%, 5년 생존율은 29.2%인 반면, 이 프로그램의 참여자는 1년 생존율이 76.6%, 5년 생존율은 54.7%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올해는 아이템 개발, 지식재산권 출원, 마케팅 활동 등에 필요한 사업화 지원금을 지난해 1,500~3,000만 원보다 대폭 상향된 2,600~3,800만 원으로 책정했다.

또한 과거 창업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기업들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졸업기업 후속지원' 제도를 신설했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